

여도 야도 '공천 룰'은 시한폭탄

새누리, 黨心 왜곡지역 예외적용 싸고 내홍

신당도 호남 광역단체장 공천 충돌 불가피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앞두고 여야가 계의 법칙인 '공천 룰'을 놓고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 룰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3지대에 만드는 통합신당도 공천 룰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원 당규대로 대의원(20%), 당원(30%), 국민선거인단(30%), 여론조사(20%) 등 당심과 민심이 절반씩 반영되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원을 무더기로 입당시켜 당심이 왜곡될 소지가 있는 지역이나, 경선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예외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심 왜곡 지역으로는 제주, 울산, 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이 모두 지도부가 후보들을 차출한 곳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차출한 원희룡 전 의원(제주), 김기현 정책위의장(울산),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인천) 등을 배려하

기 위한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흥행을 위해 30% 국민선거인단 비율을 대폭 늘리는 애니 걸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경선에서 당원 및 대의원 비중이 줄면서 당협위원장 장악력이 떨어지는 김학식 전 총리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외부에서 야권의 통합신당 바람이 거센 가운데 내부에서 공천 룰 논란이 커지면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3지대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애인도 '공천 룰'이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직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별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공천 룰을 놓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셀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호남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룰이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월 말까지 제3지대 창당이 된다고 해도 공천 룰에서의 당원 경선 참여 여부를 놓고 양측이 세게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기존의 당원을 승계하는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승계할 당원이 없기 때문에이다.

특히, 민주당은 충성도가 높은 호남지역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당원 경선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공론조사 배심원제 등의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대한 양보한다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경선 룰(여론조사 30%, 지역 배심원 평가 30%, 시민 참여 40%)이 모델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도 당원 참여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 룰을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지 않는다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 정책·노선 조율…총론일치 각론충돌

민주·새정치, 대북·경제·복지분야 등 이견 보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신당이 지향할 노선과 정책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김현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을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신당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때문에 양측은 큰 틀에서는 이념과 노선에 있어 차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구현할 세부적 정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핵별정책을 기본 뼈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이보다 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구체적으로 대북지원 등 각론에서 입장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1일 발

표한 '새정치플랜'에서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제 분야에서도 결이 약간 다르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별도로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틀을 내세워 "시민사회 집단이 공공적 사회경제에 활발히 참여해 국가와 시장을 감시·견제한다"는 대안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내세우며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 공적 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단 민주당 측의 양보로 비전 및 정강

민주당-새정치연합 주요 정책 입장 비교	
민주당	국민권익위 새정치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도적 지원	·부채 투명성 국민적 합의 진지한 인도적 지원 ·남김길을 반대·김포 초월한 행복통일 외교 전략 강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중심의 경제민주화	·민주적 시장경제 ·시민사회 집단의 사회경제 참여 통한 국가·시장 경제
·보편적 복지통한 복지국가 확장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복지 프로그램 경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정진적·순수적 믿음의 확대 ·성장친화형 복지 구축
·부자층 세 감소한 조세 정의	·재정개혁 선행 후 국민 통의하여 중세 추진

책, 당헌에 새정치연합 측의 구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해 신당의 정책은 현재의 민주당 노선보다는 중도 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노(친노무현)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노선·정책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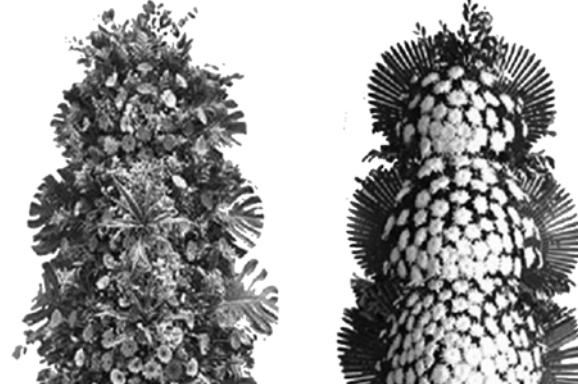
- ◎ 텔레마케터 수시 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NAVER 결제방법 단비플라워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원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강운태 "챔피언스 필드 개장 시민께 감사"

제선에 도전하는 강운태 광주시장은 9일 광주·기아 캠퍼스 필드 야구장 개장과 관련, 광주시민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성명에서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야구장 건설을 위해 민선 5기 취임 직후부터 전국 최초로 체육복권기금을 끌어오는 등 전력을 쏟아왔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시민이 주인인 아름다운 야구장'을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 2호선을 새 야구장과 월드컵 경기장으로 연결되도록 한 만큼 새 야구장은 인근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광주시장 후보와 공동 공약 발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8일 "통합신당의 전남지사 후보가 되면 통합신당의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당선이 된다면 광역단체장 간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의 22개 시군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며 전남 동서부 균형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기초단체장

서종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 모금 참여

서종진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쌍용차 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봉투' 모금운동에 참여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아름다운재단에 보내 편지에서 "광산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가족공동체가 제대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 중소기업의 80%가 자리 잡고 있는 광산구에서 고용환경의 개선과 고품질 일자리창출 문제 또한 중요한 행정 의제"라며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가 곧 광산구 사회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유재신, 수완지구에 선거사무소 개소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유재신 광주야구회장이 지난 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건물에서 치러진 개소식에는 지역인사들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이제는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시대가 필요하다"면서 "생활정지에 중점을 둔 실용정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동부에 신규 공공시설 우선 배치"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해 전남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공공시설은 동부권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부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동부권 주민들에 대한 배려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부끄럽다"면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형일 "빛고을 스마트교육관 건립"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유학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체험학습장인 '빛고을 스마트교육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학제는 중학교 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올해 광주에서는 연구학교 5곳과 희망학교 13곳 등 총 18개 중학교에서 자유학제제를 운영한 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태, 우산동 노인 접심대접 봉사활동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은 지난 8일 광산구 우산동 소공원에서 노인 접심대접 봉사활동을 펼쳤다.



송 전 구청장은 이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윤락해진 것은 그동안 땀 흘려 일해 온 노인 분들의 공이 지대하다"며 "노인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배식봉사를 마친 후 구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광주 서구청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성일 예비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 디자인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혜자 국회의원, 이응섭 국회의원, 임내현 국회의원과 종교인, 각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으로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서구,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터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며 "구정혁신으로 더불어 잘사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vpark@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